광주시교육청, 교원교육활동 보호 정책 강화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연간 550→750시간 이상 확대

교권법무팀 현장 대응, 상담, 법률 자문, 화해·분쟁 지원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교원, 학생, 학부모가 상호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

특히 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악의적 민원을 제기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되게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한다.

우선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교육’을 기존 연간 550시간에서 200시간 이상 추가 편성한다. 이를 통해 연간 750시간 이상의 교육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학생,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학부모 안내장 등 자료를 제공한다.

현재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육활동침해 신속대응팀(교권법무팀)의 현장 대응 ▲교권침해 피해 교원을 위한 상담·치료(최대 12회) ▲법률 자문 및 변호사 입회 등 법률 지원 ▲화해·분쟁 조정 ▲교원 치유 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4학년도에는 법률 지원 635건, 심리상담 1천372건, 심리치료 224건 등을 지원했다. 또 3억여 원을 투입해 교원 치유연수, 마음돌봄 프로그램, 치유캠프 등을 운영해 교원 2천660명이 참여했다.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실질적 보상 체계를 강화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보호공제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분쟁조정 서비스, 위협대처 서비스, 상해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 교원 개인 연락처 비공개, 업무시간 외 통화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모든 민원은 학교 대표전화 및 학교 누리집, 공식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 받는 ‘학교 방문 사전 예약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부모 민원이 학교 교육활동에 불필요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직결된다”며 “교원·학생·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학교문화를 바탕으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제도의 안착과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광주시, 극심한 가뭄 강릉시에 생수 1만병 긴급지원

강기정 시장 “고통 함께 나눈다”… 지방정부 연대·상생 실천

광주시가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를 돕기 위해 나섰다.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가뭄으로 생활용수 부족 위기를 겪고 있는 강릉시에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생산한 생수 ‘빛여울수’ 1만병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식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민들을 돕고, 지방정부 간 연대와 상생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우선 빛여울수 1만병을 보냈으며, 앞으로도 강릉시와 긴밀히 소통해 가뭄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요즘 광주도 불과 2년여 전에 극심한 가뭄을 겪었다. 이번 나눔은 단순한 물품 전달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며 “강릉시민들이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에도 못 미쳐 광주댐과 동복댐의 저수율이 30% 이하로 떨어지는 등 극심한 가뭄을 겪었다. 당시 광주시는 영산강 하천용수를 비상 취수하고, 물절약 캠페인, 수압밸브 조절 등 절수운동을 펼치며 물 부족 위기를 극복했다. /오권철 기자

“성폭행 당했다고 해” 처벌 모면하려 무고 종용한 50대 기소

지적장애인 이용하다 고소당할 처지 놓이자 무고 종용

자신이 고용한 지적장애인을 이용해 돈을 빼돌렸다가 고소 당할 처지에 놓이자, 또 다른 직원에게 성범죄 무고를 종용한 50대가 법정에 섰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일 무고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58)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윤씨는 2020년 아르바이트생 A씨에게 ‘지적장애인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하라고 꾀어 부추긴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사업 과정에서 자신이 고용한 지적장애인 B씨의 주택을 담보로 2억원 상당 대출을 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가로챘다가 고소 당할 처지에 놓이자 A씨에게 무고를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아르바이트생 A씨를 대표이사로 등기한 뒤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경영했다.

윤씨는 A씨에게 ‘나는 도망가면 된다. B씨를 성폭행으로 처벌 받게 해야만 네가 살 수 있다’고 말하며 무고를 부추긴 것으로 검사는 봤다.

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윤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9월30일 오전 다시 열린다. /송현근 기자

☎062-525-9775

행정복지센터 찾아가 만취 행패 60대 체포

광주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40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20여분간 욕설을 하며 직원을 향해 휴대폰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민원인 창구에서 직원을 향해 “동사무소니까 이렇게 한다”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원과 민원인 사이 가림막을 흔들며 창구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행동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석우 기자

‘콩나물시루’ 초과밀 교실… 공정 무너졌다

‘1군 학군’ 초등학교 2곳, 학급당 최대 30명…교육 질 저하

‘평준화·주소지 무작위 배정’ 원칙 훼손…공정·신뢰 무너져

위화감 팽배, 갈등 불씨…’행정 왜곡’ 불법, 주택 시장 교란

뒤틀린 교육열, 불법전입

‘광주의 강남8학군’ 봉선2동 내 초등학교에서 버젓이 잇따르는 위장전입은 학습권을 침해하고 공교육의 절차적 공정성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학벌주의 심화로 위화감 갈등을 조장하며 행정 과정의 왜곡,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등 여러 사회적 폐해도 남겼다.

봉선2동은 학원가 인접, 진학 편의 등을 이유로 특정 초등학교 2곳에 자녀를 보내려는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다. 그만큼 아파트 거래가가 높아, 사는 곳은 따로 두고 서류상 거주지만 옮기는 위장전입도 공공연하게 일어난다.

학군지 선호가 뚜렷한 A·B초등학교는 해마다 최소 60명에서 많게는 100명 이상이 전학을 온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학교 통폐합이 잇따르는 요즘, 보기 드물게 매년 4개 학급 기준 한 학년이 더 생겨나는 꼴이다.

두 학교 안팎에서는 상당수가 위장전입으로 인한 현상이라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심지어 과거 한 초등학교에는 삼남매가 모두 위장전입해 학교에 다닌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마저 불사하는 엇나간 부모의 교육열이 낳은 위장전입으로 일선 학교 교실은 ‘콩나물 시루’가 됐다.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초교는 한 반에 학생 수가 28.3명, B초교는 학급당 25.8명꼴이다.

광주 지역 전체 초등학교 한 반에 평균 학생 수는 19.9명이고, 인접한 다른 초등학교 3곳도 학급당 평균 학생 수 역시 16.9~20.5명으로 평균 수준이어서 A·B초교 쏠림 현상이 확연히 눈에 띈다.

더욱이 A초교와 B초교는 4~6학년의 경우 일반적인 3~4개 학급으로도 부족해 6~8개 학급으로 증설했는데도 불구하고 과밀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 두 초등학교 모두 4학년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28.6명에 이르러 그야말로 ‘콩나물 시루’ 같은 교실에서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봉선2동 모 초교에 재직 중인 한 현직 교사는 “아이들부터 친구가 원거리 통학한다는 사실을 잘 안다. 3월 입학 직전 석달 사이 당초 취학 아동 추계보다 최대 20% 많은 학생들이 입학한다. 위장전입 의혹이 확인돼도 막무가내로 자녀를 입학하게 해 달라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교실마다 책상을 다닥다닥 붙여 놓고 수업해야 한다. 과학실·미술실 등 특별실은 최소만 남겨두고 교실을 확충했지만 한계다. 학군지라지만 오히려 학급 당 학생 수가 적은 학교보다 공교육의 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는 “사회성을 기르는 교실이 과밀이면 학생들에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교우 관계를 깊이 맺는 데 한계가 있다. 교사도 수업 집중도가 떨어지고 산만한 분위기 속에서 한 명, 한 명 돌보기는커녕, 수업을 이끌고 가기 버겁다”고 말했다.

위장전입에 따른 학급 과밀로 공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결국 학생들이 보장받아야 할 학습권 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나아가 학군지 쏠림은 소외 지역 내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학교 통폐합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교육 기회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위장전입은 불법이다.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겠다는 욕심이 죄가 되느냐’라는 인식 속에서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 잣대 정도로 여겨지지만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이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 주소지와 실 거주지가 다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위법인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 초등학교를 거주지 기준으로 무작위 배정하는 원칙은 공교육의 평준화를 지향한다는 취지를 ‘학교 서열화’로 훼손하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편법·반칙으로 근거리 무작위 학교 배정 원칙을 무력화하며 원 거주 학생이 입학할 기회마저 빼앗는 만큼,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도 지적했다. 어린 학생들도 자칫 반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학벌주의를 체화·답습할 위험도 있다. 결국 같은 생활권 내 학생들 사이에서 위화감이 팽배하며 학교 안팎 여러 갈등 요인으로도 작용할 소지가 있다.

한 학부모는 “뿌리 깊은 학벌주의 탓에 위장전입이 횡행하는 것이지만 학벌 해소 차원에서 ‘뺑뺑이’로 학교를 배정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위장전입이 위화감을 더 크게 조장하고 있다. 같은 생활권 내에서도 봉북(봉선1동), 봉남(봉선2동)으로 나뉘어 아이들도 편을 갈라 어울리지 못한다”며 우려했다.

위장전입은 지자체의 정책·사업도 왜곡할 소지가 크다. 정확한 인구 통계는 지자체 정책 수립의 기본 행정 정보다. 자녀의 학교 배정만을 목적으로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각 통학권 내 인구 정보가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

동별 인구를 기초로 하는 생활 인프라 구축·개선 예산 배분, 주요 정책·사업 수립에도 착시 또는 왜곡을 일으킨다. 위장전입 처벌 규정까지 둔 현행 주민등록법 입법 취지이기도 하다.

학군지 주변 전세·매매 거래가 상승을 견인하며 부동산 주택시장 내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관할 지자체인 남구는 “위장전입 의혹이 늘 있던 봉선동은 실거주 현장 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적발까지 어려움이 있지만 현장 점검·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민규 기자